

건설소식

CONSTRUCTIONNEWS

'신재생 설비 · CO₂ 저감시설' ESCO 대상사업에 추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이산화탄소(CO₂)저감시설 등이 ESCO 사업대상에 포함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1일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 일환으로 지원금 5118억원을 배정하고, 세부적인 자금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지원조건 등을 마련했다.

ESCO 사업대상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CO₂저감시설을 새로 포함했다. 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2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크게 확대해 대형 ESCO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ESCO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기존 금리보다 0.25%p 인하해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절약시설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대상범위의 착수(계약)시점을 전년도 12월에서 11월로 1개월 완화하고, 올해부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전문기업)는 기술과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에너지사용업체를 대신해 에너지사용시설을 교체하고 절감된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설계 · 시공기준 녹색으로 다 바꾼다

- 국토부, 건설기술 녹색성장 실행 계획 제도화
- 사업 단계별 녹색건설 체크리스트 개발 추진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19일 중앙건설기술심의회 위촉식에서 공개한 '건설기술 녹색성장정책 실행계획'을 계기로 건설산업 전반의 녹색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계획의 주된 목표가 건설 관련 각종 기준을 탄소저감형으로 전환하고 건설사업 단계별 친환경성을 정밀하게 평가해 저탄소화를 견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선진국 대비 50~70% 수준인 국내 녹색성장 건설기술을 80%대로 높일 방침이며 이를 위한 7대 핵심과제도 제시했다.

7대 과제는 건설산업 녹색화 건설기준 정비, 시설물 탄소배출량 평가지표 마련, 녹색성장 지원제 개선, 녹색건설인력 양성, 녹색건설기술 R&D(연구개발) 수행계획, 친환경 건설현장 실현, 건설폐기물 발생저감 기술 및 제도 구축으로 짜여졌다.

건설기준 정비는 개선 우선순위, 예산 지원 규모 등을 토대로 한 연차별 기준 정비 종합계획 마련을 통해 실행한다.

국토부가 관할하는 각종 설계·시공기준에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반영해 친환경설계, 친환경자재 사용을 늘리고 자재생산은 물론 건설 전 과정에 걸친 공정혁신 방안을 반영한다.

일례로 콘크리트에 대해 환경성능 검증을 거쳐 5~15%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도로 및 교량에 최신설계법을 적용해 철근 및 강재량을 10~25% 줄이는 방식이다.

탄소배출 평가지표는 지식경제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마련한다.

건설사업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통계 통합관리시스템과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제재·지원하는 방법이다.

특히 건설사업 단계별 녹색건설 체크리스트와 녹색건설 성과지표도 개발하고 이를 웹 기반 아래 관리하고 녹색건설 베스트프랙티스를 통해 선도한다.

이런 시스템 아래 업체를 움직일 지원제도는 친환경 건설 및 건축, 에너지효율등급 등의 각종 인증제를 매개로 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 취득등록세 등 세제지원, 분양가 가산, 장기 저리융자 등의 혜택이 시행된다.

녹색인력 육성책은 사전 수급조사를 거쳐 핵심역량 모델을 개발하고 녹색전문기술자를 국비지원 아래 양성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녹색기술 확보책은 별도의 '녹색건

설기술 R&D 수행계획'에 담아 연내 확정하고 녹색 요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예산의 집중지원으로 실현한다.

친환경 건설현장 실현책으로는 현장특성에 맞는 침사지 설계방안, 토사유출량 산정기법 개선, 절개사면 복원방안, 생태통로 설치 확대방안 등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특히 업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설현장 환경관리비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계상기준도 마련한다.

건설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모델과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건설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설계지침, 시공지침도 별도 개발, 적용한다.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발생량이 많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책도 다각적으로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정의 후속조치이자 건설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실천 플랜이며 2~3월경 확정된 후 세부 과제별로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빗물 재활용' 의무화 추진

-경기도, 이르면 2012년부터

경기도가 물자원 절약을 위해 2012년부터 모든 아파트단지

의 빗물 재활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4일 물부족 해소와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아파트 단지내 빗물 재활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우선 내년 경기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10개 아파트단지에 빗물 재활용 시설을 설치한 뒤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1000가구 이상의 민간 아파트단지도 빗물 재활용 시설 설치를 권장할 방침이다.

도는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경기도시공사 및 LH가 건설한 아파트 단지내 빗물 재활용 시설의 시범 운영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시범 운영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칭 '공동주택 빗물관리조례'와 같은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이르면 2012년부터 모든 아파트단지에 빗물 재활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에서 저장탱크를 만들어 재활용하게 될 빗물은 정원수, 소방용수, 공용화장실 청소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아파트 단지내 빗물 재활용 시설 설치비가 건설사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설치비를 건축비에 포함시켜 분양가 상한선을 상향하거나 일부 시설비를 도비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작년 플랜트 수주 463억불 '사상최대'

지난해 해외 플랜트 수주액이 사상 최대인 463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식경제부와 한국플랜트산업협회는 지난 1월 4일 지난해 해외플랜트 수주가 263건, 463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최대실적인 2008년 462억 달러보다 0.2% 증가한 액수다.

지난해 하반기 주요 수주 프로젝트는 아랍에미리트(UAE) 루아이 정유 플랜트(97억 달러), 알제리 스키다 정유 플랜트(26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주바일 정유 플랜트(24억달러), 호주 고르곤 LNG생산 해양 플랜트(20억 5천만 달러) 등이다.

지정부 관계자는 “올해도 대형 프로젝트 입찰이 계속되면서, 수주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사상 첫 해외 플랜트 수출 500억 달러 돌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지정부는 오는 3월 중 플랜트 기자재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를 추가로 신설할 방침이다. ●

신 제 품

가스자동차단기 중간밸브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스 자동차단기 중간밸브인 피스존 가스타 이머가 (주)제너럴테크놀러지에서 출시됐다.

피스존 가스타이머는 지렛대 원리와 스프링 리턴 방식(특허출원 : 제00-10220)을 이용한 것으로 가스 사용을 위해 밸브를 돌림과 동시에 시간이 설정되며,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가스타 임밸브에 의해 자동으로 잠긴다. 또한 설정시간 도 달 전에 가스사용이 끝나 중간밸브를 잠글 때 가스타 임밸브의 원터치 잠금장치를 당기면 밸브는 자동으로 잠



기게 돼 사용이 편리하다.

따라서 가스를 잠그지 않고 외출하여도 화재에 대한 걱정이 없고, 가스 불에 음식물 등을 올려놓고 깜빡 잊어버려도 태울 염려가 없는 등 가스과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집안에 노약자만 있어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전한다.

문의 : 서울영업소
HP : 010-4156-9053
070-7870-9806